

W:WOOSUNG

2024년 5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5월 2주차 HOT ISSUE

- 국내 인공 축산식품 시장 ‘들썩’
- 미국, 요거트에 제2형 당뇨병 예방 강조 표기 허용

국내 인공 축산식품 시장 ‘들썩’ 축산업계 비상… 전략 대응 시급(1)



국내 인공 축산식품 산업계가 심상치 않다.

식물성 제품을 중심으로 출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세포 배양기업과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 이어 광역지자체까지 세포배양육 생산기반을 독려하고 나서며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북 의성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포배양식품 규제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 들어서는 기업들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규제 없이 세포배양 식품 연구 및 상용화가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2026년 하반기 완공 목표인 의성 바이오밸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포배양 식품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배양육 원료를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추가하면서 제도적으로 배양육 생산의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 배양육 생산 등을 목표로 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인정 신청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경우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얼마전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인공축산물을 포함한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105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인공축산물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앞다퉂 정책적,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인공 축산식품 시장 ‘들썩’ 축산업계 비상... 전략 대응 시급(2)



국내 관련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산업 환경에서 인공 축산식품 기술 개발과 양산,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식물성 인공 축산식품의 시장 확대 추세가 눈에 띈다.

신세계 푸드(베러미트), 롯데푸드(엔네이처 제로미트), 농심(베지가든), 대상(미트제로), 풀무원(지구식단), CJ제일제당(플랜테이블), 동원 F&B(마이플랜트) 등 대기업들은 브랜드 제품 위주로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제품군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의 경우 최근 식물성 조직 단백질(TVP)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생산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은 글로벌 식품 원료개발 및 신소재 기업 등과 MOU 등을 통해 TVP 품질 개선 및 제품군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동원F&B의 경우 지난 2019년 미국의 대표적 식물성 인공 축산식품 생산기업인 비욘드미트와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200억원을 조금 상회하던 국내 관련 시장 규모가 오는 2050년에는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포 배양을 통한 인공 축산식품 기술개발 및 양산화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늘면서 셀미트, 다나그린, 티센바이오팜, 스페이스에프, 심플플래닛, 씨워드 등 배양육 관련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출현했다. 대기업들은 이들 스타트업과 MOU 또는 투자계약 등을 통해 세포배양 인공축산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처리비 급등…똥 치우려 돼지 키울판”(I)

경기도의 한 지역축협 산하 A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난 4월1일부터 양돈분뇨 처리비를 톤당 4만원(탈수 기준)으로 인상했다. 기존 가격에서 톤당 5천원, 14%가 오른 것이다.

해당 사업장이 적자에 허덕여온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주변 양돈농가들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뜰이나 어려운 시기 경영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살포비 지원 70% 줄어

양돈분뇨 처리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비단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센터에 이르기까지 제반비용 상승과 정부 지원 감소로 경영난이 누적된 각지의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들이 잇따라 가축분뇨 처리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A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사용되면 스테인레스 소재라도 오래 사용하기 힘들다 보니 각종 기계 장비, 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기름값과 인건비 마저 오른 반면 정부의 액비 살포비 지원은 70%가 줄었다”며 “일선 축협의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사실상 농가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적자가 견딜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가격을 인상했겠느냐”고 하소연 했다.

생산비 10%…선넘었다

전남의 B 공동자원화센터도 지난 3월부터 가축분뇨 처리비(액비 기준)를 톤당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올렸다.

B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돼지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그간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며 “순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자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비를 한번 올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와 자원조직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축분뇨 위탁 처리비는 현재 원수 기준 톤당 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균 3만원 수준이었던 2020년과 비교해 무려 30% 이상 오른 것이다.

국내 양돈농가 돼지 평균 생산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 생산비의 5~6%라는 적정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데다 통계청이 집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과는 무려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기반이 미비한 지역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로 톤당 5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비 급등…똥 치우려 돼지 키울 판”(2)

정화방류 부담도 증가

액비 살포만 위탁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긴 하지만 액비 시설과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그 차이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화방류 시설농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데다 방류수의 색도를 맞추기 위한 약품비 투입도 늘었다. 다른 제반비용까지 감안하면 정화방류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톤당 2만원은 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축분뇨 처리비의 추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는 현실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종 규제 추가인상 불가피

당장 올 여름부터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액비 살포는 힘들어지는 시기이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웃돈 거래까지 성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시비처방서 기준 관리강화에 따른 액비 살포량 감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적용 대상 포함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가축분뇨 자원화업계는 큰 폭의 가축분뇨 처리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의 C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최소한 톤당 1만원은 더 올려야 할 형편이지만 농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양돈농가들은 “이대로라면 똥을 치우기 위해 돼지를 키울 판”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현실적인 대책을 호소했다.

채석장 소음에 막대한 피해 입은 전남 보성 한우농장



인근 채석장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한우농가가 도움을 호소해 왔다. 전남 보성군 한우농가 A씨는 농장인근 채석장의 발파 작업 등으로 확인된 것만 30여 마리 이상이 유사산됐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A씨 부부는 병원에 다녀야 할 만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우사에 가보면 송아지가 죽어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우사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렇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전부 끌어 모아 만든 농장을 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지금 처럼 소가 죽어나가는 농장을 누가 사겠냐?”고 하소연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채석장의 작업구간이 농장의 정면 쪽으로 이동한 작년부터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피해가 극심해 운영업체와 보성군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작업허가가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자리를 물렸다. 하지만 올 초 A씨는 채석장의 작업허가가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 4월 25일 A씨는 군수를 만나 채석장 확장 허가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A씨는 이날 본인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채석장 작업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오염수 방류까지 직간접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보성군은 이를 외면한 채 채석장 허가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에서는 영산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석장 허가신청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운영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작업허가 추가신청을 했다. 군에서는 이를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엄연히 허가 인증기관이 보성군이면서 책임을 영산강환경청에 떠넘기고 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소를 키워봐야 헛고생이고, 떠날 방법도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요거트에 제2형 당뇨병 예방 강조 표기 허용



미국서 요거트에 유제품 섭취의 당뇨병 예방 효과 표기가 가능해진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요거트 제조업체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두 컵의 요거트를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유제품 기반 요거트 제조업체는 요거트 제품에 해당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DA는 이번 발표에서 요거트의 섭취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상관관계는 요거트에 포함된 특정 영양소나 화합물 때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기가 가능하긴 하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함량이 1일 섭취 기준량의 30%를 충족할 경우 그 효능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다논 북미(Danone North America)가 요거트와 제2형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FDA에게 ‘건강 강조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FDA는 첨가당이 함유된 요거트 제품이 이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식단에 많은 양의 첨가당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은 해당 표기의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2형 당뇨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질병으로 이번 FDA 결정은 요거트가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FDA는 식품과 질병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품 기획 시 건강 강조 표기가 가지고 올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멸균유 수입량 증가세 ‘가속페달’



멸균유 수입량 증가세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멸균유 수입량이 지난해 3만7천톤을 기록하면서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외산멸균유의 거센 공세가 전망되고 있다.

밀크와 크림(미농축)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3.6% 증가한 1만839톤을 기록했다.

외산멸균유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데다, 국산우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삼아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해 원유가격인상과 맞물려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생산비 폭등과 환경규제 등으로 국내 원유생산량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원유생산량 대비 외산 멸균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5%에서 지난해 1.9%로 4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멸균유 수입량 증가세에 대응해 국내 유업계에선 프리미엄 우유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외산멸균유와 국산우유간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면 결국 국산우유가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2026년부터 FTA 체결에 따라 미국과 EU산 우유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6.8~7.2%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아무리 프리미엄 우유라 할지라도 가격의 당위성을 소비자들에게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맛과 품질면에서 국산우유가 외산멸균유보다 뛰어나지만 이를 인지하고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결국 가격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며 “지금은 외산멸균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보일지 몰라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면 국산 우유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충분하다. 관세철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인 생산비 절감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차하다간 과태료 '폭탄'... ASF 행정명령·방역기준 총정리

방역당국이 양돈장 방문전 미소독 의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4~5월 두달간 각 시군으로 하여금 KAHIS를 활용, 운행기록이 있는 양돈장 출입 생축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각 3대씩 무작위 선정 후 이동경로를 파악, 미소독 의심시 현장 확인후 소독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한 것이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한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에 따른 것이다.

ASF 발생 이후 양돈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그러나 자칫 위반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ASF 방역 관련 행정명령·방역기준

구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벌칙
행정명령 * 양돈농가·축산차량대상	1. 양돈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19.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23.4.5~)	
	3.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 청예사료 급여 금지('21.5~)	
	4. 양돈농장 관계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산 출입 금지('21.5~)	
	5. 양돈농가 방목 사육 금지('21.5~)	
	6. 축산차량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22.10, '23.1.19~2.28, '23.3.21~)	
	7. 양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23.4.5~)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8. 시·도 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23.4.5~)	
방역기준 * 양돈농가 대상 방역기준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22.9.5~25, '22.10~12, '23.1.19~2.28, '23.3.2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열지 않도록 점검, 고장시 즉시 정비·보수('22.9.5~25, '22.10~12, '23.1.19~2.28, '23.3.21~)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3. 공사시 사전신고('22.10~12)('23.4.5~)	
	4.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22.9.5~25, '22.10~12, '23.4.5~)	
	5. 전설 미 설치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22.9.5~25, '22.10~12, '23.4.5~)	
	6. 양돈장 내로 농장 내 진입 금지된 차량 진입 금지('23.4.5~)	